

第225回國會  
(定期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12號

國會事務處

2001年10月17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2次本會議)

- 1. 정치에 관한질문(계속)

附議된案件

- 1. 정치에 관한질문(계속) ..... 1

(14시14분 개의)

○議長 李萬燮 지금 의원들이 한 80명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은 각 당에 정치행사도 있으니 나중  
에 보충질문하실 분들은 되도록 핵심만 해 주시든지,  
가능하면 알아서 시간을 절약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議事局長 朱永鎮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에 관한질문(계속)

(14시16분)

○議長 李萬燮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10일 제9차 본회의에서  
듣지 못했던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법무부장관이 부산고검과 지검 개청식에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 고검장이 李容湖 게이트  
로 그만두게 되고 해서 장관이 부득이 내려가야  
되겠다고 양당 총무와 저한테 허가를 받고 내려갔  
습니다. 그 대신 辛光玉 법무부차관이 대리출석 했  
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國務總理 李漢東 총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0일 수요일 저에게 질문을 주신 李祥  
羲 의원, 金玉斗 의원, 金學元 의원, 李相培 의원,  
姜成求 의원, 安澤秀 의원, 李浩雄 의원, 李允盛 의  
원, 李康來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李祥羲 의원께서는 최근 국민들  
사이에 組暴 신드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시는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관한 우려를 표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일부 영화의 영향과 소위 李容湖 사건을  
계기로 조직폭력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자칫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열심히 일하는  
국민 다수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우려가 있어서 매  
우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검찰,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에  
서는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조직폭력배 추방을 위  
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  
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李祥羲 의원께서는 우리의 정치를 현실  
에 대한 불평의 정치, 미래에 대한 불안의 정치,  
정권에 대한 불만의 정치라고 하시면서 대통령의  
역사인식, 현실인식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의 수렴  
에 관한 문제 등 국정운영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요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李 의원님의 냉철한 비  
판의 말씀을 저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였고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李 의원님의 말씀을 꼭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 비판적인 시각에 의한 현실진단이 아니냐, 이  
것이 과연 보편·타당한 판단기준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었다는 점도 솔

직하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진단은 비관적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 처방은 긍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도출한다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정리하고 존경하는 李祥羲 의원님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개혁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불평·불만하는 세력의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시고, 그러면서 확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 정확한 현실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외에 각계각층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기 위해서 정부 안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 가감 없이 주례보고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게 진언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식·비공식 기회를 통해 의견 개진을 확대하고 민생, 경제현장 방문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생생한 민의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 의원께서 현재 우리 정치를 건달정치라고 표현하시고 질문하신 부분은 답변드리지 않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의 민주정치를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주정치와 국정을 운영하는 중점 가치관과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민의 희망과 요구를 충실히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를 지향한다는 기본 기조와 정신은 유사하리라고 일단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에서 예로 드신 ‘위대한 2인자’ 라는 책자는 아직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저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1, 2인자의 관계를 하루빨리 우리도 청와대에서 보게 되기를 의원님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당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표명하신 바와 같이 달라진 여소야대의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앞으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는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며칠 전 있었던 여야 영수회담의 초당적인 협력정신에 입각하셔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운영, 국정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실 것을 여야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李祥羲 의원께서는 국가정보화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그것은 정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화 추진에 대해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그동안 높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정보화의 최우선 순위는 정부의 정보화에 있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말 전국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시·군·구 민원업무에 주민등록 등 구비서류 제출을 대폭 축소하여 행정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2년 말까지 내실있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국가정보의 공동활용 등 11개 핵심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가 완성되면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 제출이 폐지되고 전자입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등 국민에 대한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정부 구현과 함께 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부구현과 관련해서 그것은 주무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저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완 답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金玉斗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 불신, 쌀 대책, 서민의 주택난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상황에 대한 추석 민심을 언급하시며 이에 대한 정부대책과 정치현실에 대한 국민여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 테러사건 및 아프가니스탄 공격 여파 등 대외 여건의 악화와 수출·투자위축 등의 대내 요인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실 있는 경제 운영과 경제 각 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그렇게 머지 않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정치인인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중지를 모으고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타난 추석 민심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 경제에 대한 불안, 안보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점에 유념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斗 의원께서는 이어서 국민의 정부가 이러한 괄목할 만한 개혁성과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초석을 놓았으며 4대 부문의 구조조정,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등 사회안정망 확충과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개혁을 추진하는 등 각종 개혁을 강도 높게 실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해 각 부처가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그동안 정부가 이러한 각종 개혁성과가 국민들로부터 온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총리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 이해집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단계에서 정책의 내용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도록 하는 한편, 시행 후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 그리고 정책목표 달성도 등을 파악해서 정책에 환원·보완해 나가는 3단계 기획 홍보체제가 정착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장·차관 등 간부들이 직접 정책 현장에 나가 국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대 국민 직접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방탄국회, 잦은 해임건의안과 탄핵결의안 제출, 저효율의 국정감사, 면책특권 남용 등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매우 질문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이 되어서 질문 요지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국회법 등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등은 입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헌법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잦은 국회소집, 면책특권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개혁과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개선방안 내용에는 제도만이 아니라 정치 행태에 관한 그런 방안까지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야당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면 경제회복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해야 할 사안

은 이를 요청하고 야당의 의견 중 수용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보다 열린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치권에 협조와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범죄수사에 있어 실체와 근거가 있는 의혹은 법과 원칙에 의거, 철저히 조사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이에 근거해서 엄정 처벌해 나가는 한편, 근거 없는 폭로 등으로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金玉斗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든 사기와 조직폭력을 강력히 소탕해야 한다,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도 단호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의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李容湖·朴順石 사건에 대해서 구 여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느냐 등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사기와 조직폭력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뿌리 뽑아 법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해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자기 개혁을 통해서 내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비리와 불법을 근절해 나가는데 있어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검찰은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李容湖·朴順石 사건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李容湖·朴順石 사건은 엄정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만은 확실하게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검찰이 확실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리라는 기대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金玉斗 의원께서는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정치가 바뀌고 국회도 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고, 과거 정권의 잔재인 설정치, 정보정치, 공작정치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 국회 운영, 경제와 민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설정치, 정보정치, 공작정치가 사라지고 정도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정치 구현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의 개선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문제 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사사로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민생 등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 이번 여야 영수회담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민련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민심이반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현재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시며 민심을 걱정하신 金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적인 위기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 테러사태의 충격과 미·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생긴 이용호 사건을 비롯한 지난번의 8·15 통일축전 참가자의 일탈 행위 등 몇 가지 일들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테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3단계 경제대책, 철저한 대테러 대비 대책 등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공직자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감찰 등 철저한 사건규명 노력과 함께 일벌백계의 각오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여 바로잡아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팎으로부

터의 도전과 불안요소를 반드시 잘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4대 개혁의 완수 등등 당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현 정권이 DJP공조를 파기했다,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간에 저도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가 파기된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현직 대통령과 현직 자민련 총재 사이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是다 非다 견해를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정치적으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金學元 의원께서는 저의 총리직 유임과 관련해서 소회가 무엇이나고 물으셨고, 安澤秀 의원께서도 거의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시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민련과 金鍾泌 총재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입장을 정함에 있어서 저도 깊이 고뇌한 끝에 국정의 안정이라는 길을 택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만두어야 할 때라고 판단되면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관문점 도끼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청와대 피습사건 등 수많은 테러전력과 현존 위협이 있는 북한으로부터 미국보다 더 큰 테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께서 제시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임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6.15 공동선언 이후 대남침투나 비방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도발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러·북 간의 공동선언 등 주요 계기 때마다 테러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천명하였고 이번 미국 테러사태와 관련해서도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테러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로서는 월드컵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모든 경우를 가상한 새로운 형태

의 신종 테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확실한 정부의 대책이 지금 세워져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하신 몇 가지 발언을 지적하시면서 金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 체제로의 통일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을 물으시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확고한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즉, 현 정부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통일방안이지 다른 어떠한 형태의 통일정책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해명을 하시라 마라 제가 건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고 믿습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언론사 세무조사가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이 아니냐, 구속된 언론사 사주를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언론사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安澤秀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安澤秀 의원께서는 세무조사를 기획·지원한 국정홍보처 등의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정권재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난번 임시국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관련 세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실시한 조세행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

쏟드리며,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언론사 사주 문제는 기소가 되어서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법 등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세청의 고유업무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 언론사 세무조사와 정권재창출과는 무관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직접 지시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安澤秀 의원께서는 국정홍보처 등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기획·지원하였다고 하시면서 동기관의 폐지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정홍보처 등의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 의원께서는 이용호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해서 검찰 수뇌부를 완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고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의 최종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지난 10월12일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입법조치가 필요한 특별수사감찰청 설치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의 청산과 우리 국민에 대한 사죄,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하시면서 일본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킨 것이 저자세의 굴욕적 외교가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질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 실현을 위해서는 역사교과서 문제,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등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이 진전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죽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금번에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수락한 것은 일본 측이 그간 계속 고이즈미 총리의 조기 방한을 희망해 왔으며 그동안 제반 정황으로 보아 우리 측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간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편 생각해 볼 때 한일 양국이 상호 최인접국으로서 내년에 월드컵을 공동개최해야 되고 이번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대테러 대책에 있어서 한·미·일의 공조와 경제협력 등 제 분야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서로 만나서 갈등해소를 도모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게 되었고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한일역사공동연구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외 인 누구나 부담 없이 참배가능한 방안을 일본 측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꽁치어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간에 고위급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자는데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 의원께서는 내년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게임 테러방지 등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李浩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8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세계 어느 나라도 새로운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없으며 따라서 내년 월드컵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우리로서는 세계인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대회를 준비해 나감에 있어 안전 월드컵, 안전 아시아대회를 실현하는 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 중인 안전대책통제본부가 중심이 되어 미국 테러 발생 직후부터 대테러 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관련 정보수집, 출입국관리, 경기장의 안전, 선수단의 신변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 정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제 테러단체의 동향, 테러침보 등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대처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 항만에 출입국대책반을 두고 테러 용의자의 입국과 폭발물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 경기장에 군·경 대테러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경기장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경기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 선수단이나 임원 등 주요인사에 대해서 특별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테러에 있어 완벽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으로써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의원께서는 열 번째로 현행 대통령제 대신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내각제를 포함한 새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시면서 국회안에 여야 정치인과 정부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치제도혁신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하셨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회 내에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먼저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국회의결로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정치제도혁신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이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相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의혹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李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검찰수사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누구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李相培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현 시국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있느냐, 저와 관련해서 시중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확고한 국정철학과 국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현실인식을 토대로 국정을 이끌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내각은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시는 등 누구보다도 민심을 소상히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께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주례보고 등 대통령을 뵙는 기회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보고드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그때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아무런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李 의원께서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됨을 지적, 안내하고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의법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확정판결을 통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임을 최종 확인한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양 대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만일 위법한 방법의 선거운동이 재현된다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우리 사회의 주류와 프로들이 수구반동으로 매도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은 반개혁·반통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

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李相培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은 모든 사안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자유로운 경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점에 장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역이나 금기와 같은 인위적 제약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에서는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매도하는 흑백논리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잔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적대적 개념이나 대립구도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호존중의 태도와 상생의 구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李相培 의원께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상황에서 주5일 근무제나 노조파업 같은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반 테러전쟁 개시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파업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본원칙에 일단 합의한 이후에 휴가일수의 조정 등 핵심쟁점사항에 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오늘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최근의 여러 가지 국내상황을 고려하여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하여 일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켜 보는 한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합의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민주당의 姜成求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국민들은 요즈음 추곡수매, 고용불안, 전세자금문제 등으로 걱정이 많은데도 정치가 민생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작금의 민심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와 수습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제침체 국면이 계속됨에 따른 경제불안, 민생불안과 테러사태 이후의 안보불안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추석 민심의 내용이라고 저도 봅니다.

정부는 경제회복, 민생문제 해결 등 국가적 당면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적극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걱정과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가볍게 털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같음합니다.

姜 의원께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영수회담이 시급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살리기 여야 영수회담 개최와 함께 경제분야에 야당과 부분적 거국내각 구성방안 등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심 협력하여 대처해야만 한다는 말씀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姜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야 영수회담의 개최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제가 대통령께 또 한번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국내각 구성문제는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8년 헌정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거국내각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문제는 통치권 차원의 엄청난 결단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만 우선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姜 의원께서는 여야정경제정책협의회를 상시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고 아울러서 대통령과 야당총재의 참석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姜 의원님의 제의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여야정경제정책협의회에서 주요정책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을 공유해 나가는데 이 두 번의 회의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의회와 토론과정을 활성화시



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협의회를 상설화하는 문제와 대통령과 야당총재가 직접 참석하시는 문제는 저보다는 여야 간에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安澤秀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하신 말씀을 모두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면 6·25가 통일전쟁이라고 한 국군의 날 기념사, 8·15 평양축전 참가자들에 대한 방북허용,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의 외교안보특보 임명, 평양방문 시 金正日이 주한미군 주둔을 양해했다고 했지만 그 후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느냐, 지난 4·13 총선 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용인하지 않았느냐는 등 다섯 가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6·25사변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는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이기는 하나 남북 간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과 다시는 남북 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통일은 반드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6·25사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한반도 무력적화 시도였고 이는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크나큰 불행이었으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8·15 평양축전 참가자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방북허용 문제는 그 당시 행사장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고 방북단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확약 등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통일부의 자체 판단과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방북 문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林東源 전 통일부장관의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 임명은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에 의거해서 새로운 통일부장관을 임명하시면서 林東源 특보에 대해서 오랜 기간 대북정책 분야에서 일해 온 그분의 경륜과 전문성을 그 분야에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특보로 임명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정상회담 당시 金正日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양해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의 분명한 사실이며 다만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한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표현은 생각건대 북한의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외교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한 지난 16대 총선 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씀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불법을 용인한 것이 아니고 NGO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이상의 다섯 가지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총리가 권유해야 한다, 총리가 한 달에 대통령을 몇 번 정도 만나느냐, 그러면 회동할 때는 기탄없는 대화를 실제 나누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 권유 문제는 제가 다섯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총리인 저에게 사과를 권유하라고 하신 말씀은 총리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다 더 올바르게 충실하게 보필하라는 그런 충고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주례보고,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와 주요행사 등에서 대통령을 수시로 뵙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식·비공식 기회를 통해서 국정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제가 파악한 민심도 가감없이 전달하는 등 기탄없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안개 속의 대북정책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은 남북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의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가의 신인도가 그전보다 많이 향상되고 외국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의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지 않게 하는 바람직한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정부가 지지를 보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점에서 대북화해협력 정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청와대와 정부 주요부처 및 산하기관의 핵심요직을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어서 부정부패가 들끓고 있다, 소위 가신그룹과 친척들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李容湖 사건, 朴順石 사건 등과 연계해서 항간에 安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의 의혹이 많이 퍼져 있음을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은 자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최종 수사결과 비리부패 연루자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와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 대통령께 특별히 건의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安澤秀 의원께서는 끝으로 대통령이 주요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당 당적 이탈과 함께 총재직을 사퇴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통한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국력의 총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와 대통령께 대한 건의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개혁정책들이 지고지선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국민에게 일부 불편과 일부 고통을 드리고 또한 부작용을 초래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위기극복, 남북관계 개선, 국가정보화 추진, 생산적 복지시책의 강력한 추진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모두 외면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라고 단정 짓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나 총재직 사퇴 그리고 거국 중립내각 등의 문제는 대통령 통치 차원의 문제로서 총리인 제가 이 자리에서 정리 안 된 사사로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특정지역, 특정고교 출신들로 특정 보직자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정부 각 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李浩雄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 올 연말까지 북한동포의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량은 어느 정도이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제기구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WFP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감안하더라도 약 100만 t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년도 국내 쌀 수급상황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쌀값 안정과 농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야 모두가 대북 쌀지원 문제를 한 때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재 대북 식량제공 문제를 여러 가지 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지원규모와 방식,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 쌀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 의원께서는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확고히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폐지론에서부터 개정불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李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진전과 그리고 여야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국민 모두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가면서 결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李 의원께서는 미국이 테러의 표적이 된 이유와 세계경찰을 자임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문제는 없

으나, 부시 행정부의 편향된 대외정책이 한반도와 우리의 통일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테러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참여수준은 어느 정도냐 하는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미국에 대한 테러는 잘 아시다시피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극렬 테러단체인 알 카에다가 배후인 것으로 확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뿐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아랍인들도 모두 적으로 간주해서 테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의 테러행위를 미국의 외교정책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금번 테러행위는 더구나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상실한 범죄자들이 저지른 인류 모두에 대한 적대범죄행위이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평화애호국은 금번 테러행위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그 큰 틀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성향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맹국 중시 외교정책은 미국만의 영예로운 고립을 추구하는 과거의 고립주의 대외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금번 테러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동맹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국제적 연대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낸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국관계 강화외교가 한미 동맹관계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한 UN 안보리의 결정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서 미국에 대해 의료단의 파견, 수송자산의 제공 그리고 연락장교단 파견을 일단 제의하였으며, 아프간 난민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우선 1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UN의 지시아래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전체 지원인원은 앞으로

의 상황 전개와 우리의 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浩雄 의원께서는 금번 미국 테러사건을 계기로 한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이 역사왜곡과 평화헌법을 파괴할 기회로 이용될 가능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미흡한 시점에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시도 등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일본정부의 대미 지원조치는 테러라는 인류공동의 적을 응징하려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일본정부도 최대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금후 테러응징 지원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우방지원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지속적인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금번 대미 테러지원과는 별도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면 이는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도 관계되는 문제이며, 과거 역사적 경위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일본의 방위안보태세 정비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 방한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이 역사교과서 문제 등 그간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이번 방한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양국 간 역사인식과 관련된 문제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문제 등과 관련해서 구체성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으로 역사인식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고, 또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는 한일역사 공동연구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를 했고, 신사참배문제는 국내외인 누구나 부담없이 참배 가능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냈고, 폄하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고위급 협의의 조속한 시작에 대해서 합의한 점, 이런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정부는 양국 정상 간의 이번 합의를 철저하게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소위 후속조치 추진에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을 포함한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현재 UN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안보리 개편의 틀이 정해지는 것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한나라당 李允盛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KAL기 폭파사건 범인이 김현희이고 그 배후는 북한이라는 사실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모 월간지의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저에게 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느냐, 또 보고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 KAL기 폭파 당시 여당의 원내총무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동안 조작가능성을 놓고 당국의 재수사 시도라도 있었느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월간지의 보도내용은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월간지 표지는 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KAL858기 폭파사건은 1987년11월29일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 여당의 원내총무는 아니었습니다. 원내총무는 7월에 그만두고 그때 특별한 당직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의 정확한 기억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KAL 858기 폭파사건은 범인 김현희가 잡혀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수사과정을 거쳤고 또 법원에 기소되어 그 후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조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엄청난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아직 우리 검찰에서는 어떠한 재수사 시도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允盛 의원께서는 북한 가극 피바다의 국방일보 게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21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극 피바다 1500회 공연 관련기사는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예술작품을 통하여 김일성 부

자의 이상화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 실상을 바로 알림으로써 장병들에게 올바른 대북관을 정립시키려는 취지에서 연합뉴스에 난 기사를 전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취지야 어떻든 동 기사와 관련하여 물의가 야기된 책임을 물어서 4월23일자로 국방일보 발행기관인 국방홍보원의 원장을 해임하였고, 편집실무 책임자는 의원면직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병 정신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방일보 등 관련자료를 게재하는 기사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李允盛 의원께서는 영화 소위 ‘애기섬’ 제작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지원규모와 내용이 무엇이나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순사건을 다룬 영화 ‘애기섬’의 제작과 관련해서 금년 4월20일부터 4월23일 기간 중 31사단에서 취재용 헬기 1대, 차량 4대, 카빈소총 80정, 단독군장 80세트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화 ‘애기섬’에 군 장비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영화의 최초 시나리오인 여순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군 스스로 판단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내용의 시정을 요구하자 영화제작사 측에서 ‘우리는 관련된 소품 즉, 군의 구형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일부 군 장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사기밀의 보호와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심층 검토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시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께 더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允盛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6·25사변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객관적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安澤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통일이 지상과제이기에는 하나 남북 간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또한 남북 간에 6·25전쟁같은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 이 발언의 진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물론 대통령께서도 6·25사변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한반도 무력적화 시도였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불행이었고, 이러한 큰 비극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李允盛 의원께서는 건교부장관이 일곱 번이나 바뀌는 등 총리가 제청한 장관들의 중도낙마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나……

일언이폐지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자로서 국무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검증해서 이번의 건교부장관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李允盛 의원께서는 국가정보원의 金亨允 전 경제단장에 대한 수사은폐사건의 배후에 이번 권력형 비리사건의 몸통이 있다는 향간의 소문이 있는데 보다 더 강력한 수사를 해 줄 수 없느냐, 아울러 신안그룹 朴順石 회장을 도박혐의 한 가지로 전격 구속한 것이 납득 안 간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정보원 金亨允 전 경제단장이나 신안그룹 朴順石 회장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배후 등 모든 관련사실은 이번에 검찰이 벌이고 있는 철저한 수사에 의해서 앞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允盛 의원께서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진 빚, 18억 달러의 일부를 북한의 발전부문 현대화사업에 지원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진위는 무엇이나, 지난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 측으로부터 우리의 대러 경제협력관과 북한 발전설비의 현대화사업을 서로 상계하자는 제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 측은 금년 2월에 제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제로 채택하여 같이 논의하자고 희망하였으나 우리 측은 동 문제가 경제공동위원회의 의제로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것은 의제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인해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李康來 의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陳承鉉, 李容湖 사건 등 금융사기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이나, 주가조작과 주식 불공정 거래자가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집단소송제 도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진승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상호신용금고법을 금년 3월28일 개정을 했습니다.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금고에 대해서 사외이사과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고 모든 금고에 준법감시인 선임의 의무화하는 등 대주주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상징후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상시 밀착 감시토록 함으로써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사기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 드립니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李康來 의원께서는 미국 테러참사 관련 반 테러전쟁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 테러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전쟁의 장기화 여부, 확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가 저절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

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 테러전쟁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 또 장기 국지전으로 가는 것, 장기 전면전으로 가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건 간에 이러한 세 가지 모든 각각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추경편성 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원유 등 주요 원자재 수급의 안정,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적 역량의 결집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하나 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여야 간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은 매우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李康來 의원께서는 미국 테러사태에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과 단결된 모습은 애국심 그 자체였다고 하시면서 과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애국심이 있는지 반문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李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테러사태 다음 날 공화, 민주 양당 지도자들이 의사당 앞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오늘날 세계 초강국 미국을 지탱하는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고어 전 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의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민들의 단결을 호소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너무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李 의원께서는 미 테러가 우리 국내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우리 국내적인 정치 행태를 추상하시면서 개탄하는 말씀을 하셨으나 그래도 긴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난을 당하게 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수 없는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국난극복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외환위기 시의 금 모으기 운동은 바로 우리 국민의 이러한 저력, 애국심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테러사태 이후에 맞이한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국민의 이러한

저력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李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국가지도자들의 깊은 자성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도 깊이 깊이 자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來 의원께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긴요하고도 핵심적인 정치개혁은 정치권의 전도된 가치체계와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李 의원께서 오늘날 한국정치의 병폐를 진단하시고 그 처방으로 법 제도상의 개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잘못된 가치체계와 정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당리보다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권보다는 국가가 상위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머지 않은 장래에 李 의원께서 제의하신 정치개혁이 우리 이 국회에서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李 의원께서는 대통령께서 내년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당의 의견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말씀하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저에게 물으셨는데 솔직히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감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 볼 때,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선거풍토를 일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히 가지고 계시다고 저도 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나 건의도 적극 수용하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히신 표현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총재께서 제창하신 국민 우선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 우선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과 국정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주요 정책결정과정 등에 있어 국민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李 의원께서 말씀하신 야당 총재의 국민 우선의 정치 구현을 위한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민주정부라고 할 것 같으면 협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로서 협력하는 것이 민주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아홉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萬燮 앞으로 답변하실 분이 洪淳瑛 통일부장관 그리고 李根植 행자부장관, 辛光玉 법무부차관 세 분이 남아 계시는데 대한민국의 머리 좋은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수식어는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淳瑛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통일부장관입니다.

지난 10월10일 상오에 있었던 국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李祥羲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통일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닌 민족사적 과제라고 하시면서 기본원칙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고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정권이 너무 조급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국통일 과업은 역사적·민족적 과제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남북 평화공존 그리고 평화통일은 사실은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여 온 대북정책의 기본이면서 목표입니다. 1988년의 7·7선언이라든지 또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이러한 대북 평화공존 정책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도 같은 맥락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공존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과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의견하게 잘 하라는 말씀으로 잘 유념하겠습니다.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사실 대북정책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햇볕정책을 추구할 때 우리

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고하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조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민련 金學元 의원님 질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쌀을 주더라도 장기적 차관형식으로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사용계획과 집행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사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대북지원의 내용과 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중요한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은 그 전체 규모를 이미 예산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게 주어진 그런 재량의 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국회에 대한 보고·협의를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기금 사용제도는 지금과 같이 행정부의 재량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쌀지원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쌀지원문제도 사실 대화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쌀의 대북지원은 사실 남북교류와 협력의 기본적인 고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와 물량에 관해서는 역시 남북관계의 추이 그다음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큰 틀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또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구체화하는 데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 李相培 의원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햇볕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방적 퍼주기식으로 끌려다니는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을 즉각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특별히 우리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휴전협정이 그대로 유효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닙니다.

또 남북 간에는 아직도 자유왕래라든지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왕래, 상호 교역,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화공존의 큰 틀에서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의 후에 상당한 정도로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전쟁과 같이 전세계가 다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비방과 중상이 중지되어 있고 또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남북 평화공존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상당한 정도로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가족상봉이 있었고 또 200여 개에 달하는 위탁가공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있고 또 6000명이 넘는 한국의 기업인들, 민간계 사람들이 북한을 내왕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분야의 교류, 왕래 이런 것이 다 남북평화공존의 징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햇볕정책의 덕분으로 북한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 북한은 많은 외국, 특별히 서방의 국가들과 국교를 개설하면서 나라를 점점 더 개방해 가고 있고 또 국제공동체 일원으로 점점 더 국제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직접 간접으로 우리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관계를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을 잘 유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우리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 이런 기본원칙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것을 더욱 분명히 하면서 대북 평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대북 평화정책은 사실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

화를 유지하고 있고 평화공존의 체제를 향해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과정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李相培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점을 잘 유념하면서 대북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培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노동당 창건일에 오랜 세월 반 독재와 민주화 투쟁 경력을 자랑하는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한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북측은 지난해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 우리 측의 30개 기관 대표 또 35명의 개별인사에게 초청서한을 보내온 바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 받은 단체와 개인 중 10개 단체 대표자 33명과 개별인사 9명 등 총 42명이 정부의 방북승인을 받아서 동 행사를 참관한 바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우리 남쪽 인사들이 방북해서 북한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남북 간 이해와 화해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각 분야의 여러 가지 견해와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간분야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은 결국은 남북의 이해와 또 상호공존을 촉진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의 安澤秀 의원님 질문입니다.

8·15평양축전 참가자 방북 허용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어떻게 방북을 허용하게 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방북승인 등 제반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8·15 경축 그 행사를 계기로 한 북한방문도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념탑 앞의 행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불허하였다가 그 기념탑 앞 행사를 불참한다 하는 약속을 받고 또 북한당국으로부터도 이러한 기념탑 앞 행사를 참관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방북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때 추진본부의 역량과 판단을 존중하



면서 추진본부 대표들에게 각서를 징구하고 철저한 방북교육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방북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 행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제가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대표에게도 지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식의 민간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澤秀 의원의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수정할 계획이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이 평화유지, 평화의 확보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국정의 중요한 목표이면서 과제입니다. 한반도는 늘 전쟁의 위협이 있는 전쟁위험국가로 세상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최근의 국제정세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할 때 평화유지를 위하여 대북포용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북 평화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런 큰 국시 안에서 그런 큰 틀 안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또 군사적 억지력의 유지라는 그런 기본 토대 위에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북포용정책은 사실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2년의 남북 기본합의서라든지 또 1988년의 7·7선언 이런 것이 다 대북 평화공존정책의 표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북 화해 평화공존정책의 덕분으로 한반도에서 이 정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북한이 점차 국제사회에 더 참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대북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큰 틀 안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주 단단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는 점을 더욱 더 유념하고 강조하면서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천년민주당의 李浩雄 의원님 질문입니다.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북 식량제공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흉작이 들든지 풍작이 들든지 간에 구조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개 600만 t의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풍작이 들어서 450만 t이 되면 150만 t이 부족합니다. 금년이 바로 이 경우인데 국제사회 지원 등을 합해 공급을 개선하게 되면 금년에는 약 100만 t 정도의 양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북 양곡지원 은 인도주의적 견지, 인도주의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이런 장기적 안목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대북 대화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큰 그림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일반적 추이와 연계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식량제공을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양곡제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전진적이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우리 정부는 약 30만 t의 보관미와 옥수수 10만 t을 북한에 제공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회 측과 협의해 온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식량제공 문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리고 남북관계 추이를 보아가면서 식량제공의 규모와 방식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萬燮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根植 행자부장관 나오세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저에게는 李祥羲 의원님, 金學元 의원님, 李相培 의원님, 李康來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

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祥羲 의원님께서서는 현재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급여제도, 그리고 농업사회의 행정구역 및 산업사회의 행정체제로 앞으로의 전자정부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 조직, 사무관리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과거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탈피해 가지고 능력과 성과를 우선하는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제, 연봉제,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수한 인재를 공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고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도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쇠퇴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인력을 감축하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 위주로 인력과 기능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적합하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현행 행정구역이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지리적 요소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온 관계로 사회 각 부문과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편에 따른 효과, 합리적인 개편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자정부의 진전에 걸맞는 인사제도, 행정체제를 갖추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교육도 알차게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의원님께서 내년도 월드컵경기와 부산아시안게임의 안전개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李康來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안전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부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월드컵대회를 유치한 10개 도시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에 월드컵기획단 그리고 치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장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대회 한 달 전부터 경비전담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안전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또 입장관람객에 대해서도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색을 실시하는 등 위해요소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선수 그리고 요인 등 참가단에 대해서는 무장신변보호대를 밀착배치하여 입국에서부터 출국할 때까지 24시간 신변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와 홀리건 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그리고 참가국 간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서 국제테러리스트와 홀리건 명단을 사전에 입수하고 입국단계에서 차단하는 동시에 경찰특공대와 홀리건전담부대를 활용, 신속한 진압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안전대책 통제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준경찰력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또 안전하게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金學元 의원님께서 6·15 선언 이후 대북유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호하는 친북 이적세력을 발본색원할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경찰에서는 금년 9월 말 현재 서울민주노동자회 등 3개 조직의 조직원 21명을 포함해서 총 17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으로 사법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국가안보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적세력들의 불순행위관련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불순활동에 대비한 사이버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李相培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 들어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정부예산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98년도까지는 우리 부의 경우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 두 단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99년도부터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로 150억 원이 처음 계상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인 75억씩 사업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부

터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매년 150억 원씩 계상한 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康來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부패 및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비리척결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일부 비리 때문에 물의가 야기됨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패척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난 6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내의 유관기관을 통하여 공무원비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부패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면서 행정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부패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李康來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국제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지 그리고 컴퓨터테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미국 테러참사를 교훈삼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각종 테러에 대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테러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폴, 외국의 정보기관 등을 통해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24시간 사이버순찰 그리고 긴급 추적수사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테러 관련 경보조치 및 업무협조용 핫라인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테러에 공동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李相培 議員 의석에서 - 친북단체로 불법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국가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

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培 議員 의석에서 - 그런 단체에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다.

(○李相培 議員 의석에서 - 불법행위를 한 단체는……)

물론 불법행위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규정이 되어서 지원되어서는 안 되고 그 사업 자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적이고……, 저희들에게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사업이면 심사를 해서 객관적인, 공적인 심사기구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萬燮 李相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을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안 하고 거기에서 한마디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다음 辛光玉 차관, 나오세요. 의원들 다 바쁘게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묻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요. 머리가 좋다고요.

辛光玉 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법무부차관입니다.

장관의 지방출장 관계로 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李祥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현행의 법조인력 양성제도와 임용제도를 가지고서 지식기반사회의 전자정부 구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전자상거래법 관련강좌를 병행하고 있고, 판·검사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에도 역시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사법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추가되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전자정부 구현이 가능하도록 법조인의 정보화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법치시장경제로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법치시장경

체체계 확립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경제관련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업의 자율성확보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법치시장경제의 법체계 확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천년민주당金玉斗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 사건 등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여권인사 등의 관련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鄭炫爰·陳承鉉 사건 등에 있어서 여권 인사 등이 관련되었다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유휴지 개발 비리사건이나 李容湖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정치권 인사 등이 관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악용으로 정부나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면책특권의 한계에 대한 법무부와 법조계, 학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아시는 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고, 국회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 없는 허위사실이나 모욕·사생활에 관한 발언은 면책특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자율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판단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서는 정당과 정치인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정치인 관련 부정부패사건에 있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 신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또 주요 참고인이나 증인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등 사유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국세청의 대선자금 모집사건의

재판진행상황 그리고 李碩熙를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선자금 모집사건은 현재 일심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만 徐相穆 피고인을 제외한 林采柱, 朱正中, 李會晟, 金兌原 피고인 등에 대한 사실심리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徐相穆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결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세청차장 李碩熙에 대해서는 2002년2월8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서 현재 미국 수사기관에서 李碩熙를 검거하기 위해 그 소재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사건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李碩熙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金玉斗 의원님께서서는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은 11월 13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현재 일심재판이 계속 중이며, 증인의 불출석 등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鄭在文 의원이 야당총재의 위임장을 가지고 북측관계자를 접촉하였다는 김양일의 법정증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鄭在文 의원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증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김양일의 증언내용과 관련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사건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해서 본래 기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혹시나 있는지 하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의 사업 성장배경에 야권인사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李容湖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자유민주연합 金學元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최근 친북·이적세력이 발호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그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

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굳건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남북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 하는 판단하에서 친북·이적세력 등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 사건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李亨澤 전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환하지 않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李相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 사건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 반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安澤秀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특별감찰본부 조사결과 2000년5월 李容湖에 대한 사건처리과정에서 검찰간부의 압력, 청탁 및 금품수수사실이나 직권남용 등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서울지검 간부들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任彙濶 부산고검장과 林梁云 광주고검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했고, 李德善 군산지청장에 대해서는 사표수리 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李容湖의 다른 로비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비리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李萬燮 의장, 金鍾河 부의장과 사회교대)

李相培 의원님께서서는 또 검찰에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한 것은 국민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간부가 李容湖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한 것일 뿐 이에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와 呂運桓의 로비자금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유입되었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감찰본부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검찰간부가 이용호나 여운환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현재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이용호·여운환의 또다른 로비의혹에 대해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새천년민주당 姜成求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사건은 물론 노량진수산시장인수 압력설, 야당과 朴順石 회장과 의 연계설 등 정치관련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될 경우에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법무부가 당초 8·15 축전 방북에 반대하였는지, 이후 어떻게 방침이 바뀌어서 방북이 허가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다만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만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동법 시행령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일원인 법무부는 통일부가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판단자료를 제공할 뿐이고 통일부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부처의 의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통일부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요청에 따라서 당초 법무부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북측과 공동으로 축전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방북신청을 전부 불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일부에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의 의견개진 직후 북한 측에서 동 행사를 남측과 공동이 아닌 북측 단독행사로 개최하겠다는 등 변화된 입장의 통보가 있었고 방북단 대표자들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대표를 통해서 약속하는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 방북을 허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을 갑자기 구속한 것은 이용호사건과 박순석의 다른 비리를 축소하고 권력층 주변으로의 사건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李允盛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27일에 대검찰청에서는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질서문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에서는 골프장 주변 폭력배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초순경 박순석 회장이 하도급업체 사장들과 어울려서 골프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한 것일 뿐 다른 의도나 이유는 전혀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골프장 관련사건 수사실적은 또한 7월1일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 8월31일에 수원지검에서는 폭력배 등 4명을 단속해서 기소한 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새천년민주당 李浩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구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승철 후보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출입국에 관한 기록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李允盛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金亨允 국정원 전 경제단장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배후세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5일 김형윤 국정원 전 경제단장을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해서 철저히 수사했지만 김형윤 이외에 이 사건에 개입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형윤은 10월13일자로 구속기소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새천년민주당 李康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李容湖 사건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가 무너졌으며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G&G그룹 회장 이용호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검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검 중앙수사부와 특별감찰본부에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각종 부정부패사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법무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장관은 지난 10월12일 그동안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받아 온 제도들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서 검찰의 복무기강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 앞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개혁방안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방안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저희들의 의지와 열정을 믿어 주시고 계속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朱鎭亨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지난 9월27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민주당 명의의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鍾河**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李祥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祥羲 議員** 한정된 시간이니까 행정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조리가 결국은 해소되는 길은 근본적으로 국가 정보화의 길이다, 그런 국가 정보화의 견인차는 전자정부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도,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전자정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루즈벨트 대통령도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대형 토목공공사업, 테네시벨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IT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이 IT산업이라는 것이 죽으면 우리의 산업구조조정은 실제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자정부가 이 IT산업에 있어서의 거대한 공공시장을 만들어준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공감합니다.

○**李祥羲 議員**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행자부 내부 등에서 알아봤는데 국내에서 개발했던 니들웨어 중에서 주민등록증 확인 연동시스템과 관련해서 외제를 써야 되느냐 국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도 특히 장관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시장에서 IT 내수시장을 열어주는 국가산업 육성정책의 차원에서 명확한 정책 방향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장관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챙겨 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예.

○**李祥羲 議員** 그리고 다음은 전자행정이라고 하면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또 행정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요전에 국정홍보처가 1면에 ‘한국인은 위기에 강합니다’ 하는 공익광고를 냈는데 이런 광고를 위시해서 지방자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사, 치사, 이벤트성 행사 이런 등등이 거의 홍보비용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틸버그라든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라든가 미국의 인디아나폴리스라든가 더군다나 아일랜드라든가 전자정부, 전자행정을 추진하는 나라들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잘 한다는 것을 행정 홍보,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주인이, 시민이 이런 것을 잘 한다 기업이 이런 것을 잘 한다 그러면 그 시민을 홍보 해주고 기업을 홍보 해줘서 시민과 기업이 칭찬하고 잘 하는 그쪽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닳아가게끔, 쫓아가게끔 유도해주는 홍보를 했지, 세금 받아서 일을 하는 종이 ‘내가 이렇게 일을 잘 한다’는 홍보를 하지 않는 사실을 보면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특히 지방자치 행정 등을 보면 행정홍보비용이라는 것이 그런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국가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홍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예산지침을 시달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李祥義 議員**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전자정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히 홍보처라든가 지방행정 홍보가 필요없는, 그래서 국민과 더불어서 행정과 정치를 해 가는 시스템이겠지요. 이런 쪽에서 빨리 전자정부의 기틀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가 된다면 행정이 아주 투명해집니다. 어느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넣은 민원이 지금 현재 국장 단계에 있는지 과장단계에 있는지 하는 것까지 인터넷공개 처리시스템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祥義 議員** 법무부차관께서 지금 시장경제에 걸맞고 전자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제와 관련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시장경제를 법치시장경제로 만들어가는 데는 전문가 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면 결국은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독금법(genuine anti-trust), 그리고 셋째는 부경쟁방지법(unfair trade competition), 이 3법이 결국은 법치시장경제의 세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법고시를 위시해서 전체의 체제를 보면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法務部次官 辛光玉** 지금으로서는 그런 정도는 아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祥義 議員** 그래서 특허법원도 이제는 만드셨는데 우리 국내에서 일종의 법적 분쟁보다도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되는 국제적 침해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쟁이 국익과 관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법조인력문제도 이 시대에 맞게끔 법조인력양성제도 역시 임용제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法務部次官 辛光玉** 의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법체제 개혁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도 실상은 법조계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지금 디지털 제너레이션(digital generation)에 맞출 수 있도록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랄지, 전자거래기본법이랄지, 전자서명법이랄지, 모든 관련법령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祥義 議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조폭정치다’, ‘건달정치다’ 하는 이 말을 담는 것 자체도 여러 가지로 썩스럽고 또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조폭마누라’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조폭마누라가 드디어 헐리우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90만 불에 수출까지 되게 되었고 또 이 영화가 수출이 되면……

우리가 국가홍보를 좋은 이미지로 해야 될텐데 외국에까지 이런 류의 좋지 않은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폭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그냥 단순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화가 되고 또 정보화가 되고 그래서 이 조폭은 증권시장이라든가, 법원공매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하물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까지 어떤 면에서는 정치조직화가 되고 경제조직화가 되어서 일종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해 가는데 이런 경우가 부분을 예방적인 법체제로 다스려 가는 쪽으로 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가 뒷북치면서 가고 사회는 또 거기에 노출되는 만큼 아주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금감원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사후관리적 법체제가 아니라 예방적 법체제를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의원님 아주 적절하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직폭력배들의 척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많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祥義 議員** 개혁은 역시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법조 부분이 제일 보수적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더 과감하게 개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

○法務部次官 辛光玉 명심하겠습니다.

○李祥義 議員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鍾河 李祥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 議員 새천년민주당 李浩雄 의원입니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李會昌 총재께서 한나라당을 일컬어 '인천 폭동의 주모자와 그를 쫓던 공안검사가 모두 함께 있는 당'이라고 표현하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지금부터 15년 전인 1986년 5월 3일 인천 직선제 개헌 민주화 투쟁의 주동자로 구속되어서 고문기술자인 李根安이한테 모진 고문을 받을 때보다도 더 치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李會昌 총재의 발언은 5.3 개헌 투쟁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발언입니다. 총재로서 당신의 당을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규정하든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5.3 직선제 개헌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던 당시 야당과 재야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 한꺼번에 욕보인 이번 李會昌 총재의 발언은 그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발언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완전한 부정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시민, 국민들에 대한 인격모독입니다. 당시 5.3 직선제 개헌 쟁취 추진본부 결성식은 그 당시의 야당이던 신민당에서 주도했습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李敏雨 씨 또 야당의 실질적인……

(「보충질문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질문이 나오니까 들어보세요.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金泳三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金大中 대통령이 폭동의 주모자란 말입니까?

○副議長 金鍾河 李浩雄 의원! 보충질문만 하세요.

○李浩雄 議員 당시 재야에서는 민통련이 주도했는데 부의장하시던 여기 李昌馥 의원님, 그리고 사무처장이었던 한나라당의 李富榮 부총재 그리고 총무국장이었던 張永達 의원, 상임위원장 林采正 의원……

○副議長 金鍾河 李 의원!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지 나오라고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李浩雄 議員 국무총리한테 질문하겠으니까 총리 나와 주세요.

○副議長 金鍾河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시고 보충 질문을 하세요.

○李浩雄 議員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은 林采正 의원, 서울지부 부의장에는 현재 한나라당의 원내사령탑인 李在五 의원 그리고 당시 서노련으로 참여했던 金文洙 의원 등 현역의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다가 돌아가신 많은 분들 중 諸廷坵 전 의원, 공해추방 위원장인 崔冽 현재의 환경운동연합대표 등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모두가 폭동의 주모자라는 말입니까?

1986년 5.3 인천 직선제 개헌 민주화 투쟁은 85년 이후 이어진 직선제 개헌투쟁의 분수령이 되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진 민주화 운동 역사에 길이 빛날 사건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4.19보다도 더 광범위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군사 독재정부를 굴복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여 실질적인 민주화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5.3 인천 직선제 개헌투쟁에 대한 부정은 민주화운동의 전면적인 부정인데 李會昌 총재는 민주화운동을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직선제 개헌 민주화 투쟁을 폭동이라고 한다면 李會昌 총재는 스스로 부정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리!

이런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반역사적인 사고방식은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는 등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오랫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올 바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만큼이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운동도 우리나라와 후손에게 길이 새겨야 할 값진 자산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의 기념도 당위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5·3 직선제 개헌투쟁, 87년 6월항쟁은 민주화운동이었습니까, 폭동이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國務總理 李漢東 지금 李浩雄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까 본질문에는 없는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까?

○李浩雄 議員 보충질문이……

○國務總理 李漢東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본질문이 있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때 보충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李浩雄 議員 그래서 총리께서 답변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그런데 李浩雄 의원 뿐 아니라 그동안 본질문에서 안 한 질문들을 많이 하였고, 저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일일이 가리지를 았고 다 답변을 해 드리도록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노력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위 李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3 인천사건이라는 것은 86년5월3일 인천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당시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의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를 계기로 해서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집회를 한 끝에 시위를 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민주화보상심의회에서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 사건으로 포함시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신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浩雄 議員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지금 보상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만이 아니라 우선 1차 신청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있었는데 한 8400건이 들어와 있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련 여부를 현재 심사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고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浩雄 議員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6년5월3일 인천에서 있었던 개헌현판식은 분명히 직선제 개헌을 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제가 여기서 민주화운동이나 여부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민주화보상심의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浩雄 議員 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였다, 규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법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켰다는 사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浩雄 議員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법이 통과되어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적인 동의 여부를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지요.

○李浩雄 議員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이겠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법의 문제 아닙니까?

○李浩雄 議員 그러면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하시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그런데 정당·정파 간의 정치적인 발언에 관해서……

○李浩雄 議員 이것이 어떻게 정파 간의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李浩雄 의원께서 한나라당 총재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저한테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당 간의 정치공세 비슷한 그런 가운데 정부가 끼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李浩雄 議員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것이 이것은 정당 간의 정치공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國務總理 李漢東 제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是다 非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다만 법률적인 것, 보상에 관해서 입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李浩雄 議員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그치고 있는 5·3 인천직선제개헌투쟁을 6월항쟁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정부 차원의 행사나 기념일 지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정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國務總理 李漢東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李浩雄 의원께서 제의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浩雄 議員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왜

곡된 역사인식이 소위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좀 나와 주시지요.

(장내소란)

중요한 문제니까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들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지금 국민여론은 정치권과 함께 공무원사회도 개혁되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도 공무원사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과 국민들 의식이 높아지면서 공무원들도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대민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고 있고 만연했던 부정부패도 일정 정도 근절되고 있는 바람직한 상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공무원 내부에서 자신들의 여러 부조리와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환으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 제기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 몇 달간 진행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회와 갈등이 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浩雄 의원님께서 저에게 전혀 질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정리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浩雄 議員** 예, 말씀해 주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갈등이라기보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직장 내부에서 하급 직원들이 구체적으로는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의 직원들이 기관장, 4급 이상의 기관이 장으로 되어 있는 기관장과 조직내부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해관계를 스스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9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0여 개 대상기관 중에서 240개, 10%, 5만여 명 정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입장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대부분의 직장협의회에서는 당초 법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법 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장협의회에서는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 직장 내부의 일을 연대해서 의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의 일이라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밑의 직원들이 의논하면 될 것이지 행정자치부 직원들과 재정경제부 직원들이 의논해서 행정자치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논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이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지난번에 시위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엄연히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浩雄 議員** 지금 공무원 노조가 바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단계, 시험 단계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측면이 있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공무원 노조는 언젠가는 구성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浩雄 議員** 잘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허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行政自治部長官 李根植**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 군수 시절에, 83년 가칭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지금 현재 국민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李浩雄 議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鍾河** 다음은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 출신 金學元 의원입니다.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15방북단의 불순한 언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와 같은 사상논쟁과 그리고 그들이 남한으로 왔을 때 공항에서 극심한 남남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와 같은 8·15방북단의 하찮은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林東源 장관을 해임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8·15방북단의 이와 같은 언행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 가능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북한이 과거에 KAL기 폭파, 아웅산 폭파사건 등 많은 테러행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6·15정상회담 이후에 이와 같은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15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들은 65%가 넘는 국방력을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그리고 우리 이남에서 미전향장기수를 북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국군포로나 납북어부 1명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계속 주한미군에 대해서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88년 이후 테러지원국이라는 누명은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미국의 테러와 그 응징, 거기에 관련된 재테러, 이러한 공포와 위협이 세계를 휩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솔한 언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분명히 자유민주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정책이지 그 이외의 체제를 허용하는 통일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8·15방북단들이 북한에 가서 한 행동은 ‘만경대 위업 이어받아서 통일 위업 달성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한의 통일방침대로 이 나라를 통일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8·15방북단의 경솔한 행동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화해 교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화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상을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네가 행동하는 것을 조금 양보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양보하자’ 해서 서로 교류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저쪽을 지지하고 그쪽에 선동하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남북화해 교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에서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

는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서 남과 북이 오순도순 앉아서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서 북한의 통일정책과 북한을 찬양 고무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8·15방북단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외무부장관 경력과 러시아대사 경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외교안보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아시다시피 외교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통일부장관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8·15방북단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경위를 소상히 보고 받으셨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議員** 그때 8·15방북단의 구성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였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통일연대, 민화협, 그 다음에 종단 대표……

○**金學元 議員** 그런데 그것은 길에 내세운 단체의 이름이고 실제로 거기 구성원을 보면 범민련이라든지 한총련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 구성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金學元 議員**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金學元 議員**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한테 보낸 공한 속에 들어있는 분명한 지적입니다. 법무부에서 통일부장관한테 보낸 공한을 읽어보신 적 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金學元 議員** 거기에 보면 범민련과 통일연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래서 방북을 신청한 개인의 명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임수경 씨라든지 그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들도 그 속에 섞여 있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법무부가 지적해 왔기 때

문에……

○**金學元 議員** 또 거기에 수배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金學元 議員** 그래서 정부 각 기관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가는 상당한 문제 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방북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낸 사실, 또 구두로 한 사실은 알고 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임수경 씨도 제외했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金學元 議員** 범민련과 한총련 단체 등에서 상당히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은 전부 제외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임수경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아닌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법무부에서……

○**金學元 議員** 전부 제외하고 보냈다고 하면 임수경 씨도 빠져야 되지요. 그런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보장회의에서 이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한 것은 사실이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제외하고 승인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또 법무부에서도 ‘불허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議員** 법무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찬양 등 정치선전에 이용당하거나 또 북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간주될 우려가 농후하고 또 그 장소에서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이번 방북을 주도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나 한총련 등 이적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종래의 이적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방북 시에는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위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견 방북신청은 전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확실

하지요, 맞지요? 저는 지금 법무부에서 보낸 공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맞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金學元 議員** 국정원에서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는 취지였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金學元 議員** 통일부에서는 당초에 보내지 않을 방침이었습니까, 아니면 보내도 좋다는 방침이었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일단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본부가 방북신청을 해 왔을 때, 3대기념탑 앞에서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일단은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그런데 하루 사이에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것이 일간신문에 뭐라고 보도되어 나왔느냐 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보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통일부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국정원의 의견을 모두 참작해서……

○**金學元 議員**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까지나 팩트고, 그 문제는 통일부장관이 사후에 보고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統一部長官 洪淳瑛**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金學元 議員**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金學元 議員** 그러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신문보도가 그렇게 나온 것은 추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金學元 議員** 이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중대 오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중재 같은 것을 건 사실이 있습니까? 신문을 고발한 적이 있나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金學元 議員** 국가원수에 대한 이 중대한 오보

를 왜 고발하지 않았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신문기사가 그렇게 짐작한 것이지, 그렇게 정확하게 보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 기념탑 앞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원래 통일부 입장은 민간분야의 교류와……

○**金學元 議員** 좋습니다. 지금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3대통일현장기념탑 앞에서 남북이 같이 하지 않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팩스 한 장…… 그런데 300명이 넘는 방북단 중에서 4명이 각서를 썼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간부들의 각서를 받았습다.

○**金學元 議員** 4명입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4명이 넘는 숫자가 각서를 썼습니다.

○**金學元 議員** 4명이 넘는다면 구체적으로 몇 명이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4개 단체 대표입니다.

○**金學元 議員** 그러면 돌출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4명의 각서를 받고 그런 행동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안심하고 보냈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議員** 그런데 북한이 지난 50여 년 동안 수없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몇 %나 이행이 되었다고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특히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것은 아주 근본에 관한 질문이신데 사실은 그 행사가 북측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된 그런……

○**金學元 議員** 옛날에 金九 선생님이 방북했다가 당한 그런 전례를 비롯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방북해서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념탑 앞에서 우리 독자적으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보내달라’는 북한의 팩스 종이 한 장 가지고 북한을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그것을 신뢰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북인사 단체대표 4명이 대표로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 4명 외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 구체적으로 대표가 대신해 달라고 하는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런 위임을 받지 않았습다.

○**金學元 議員**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알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저희 법사위에서 방북했던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중의 하나가 자기는 그와 같이 대표단의 누가 대표로 각서를 쓴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전혀 위임한 사실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대표가 각서를 썼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4명의 각서만 받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보낸 정부의 행위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민간분야에서 남북간에 교류와 접촉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돌출행동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처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북한 대표단에게 그것을 공식으로 제기했습니다.

○**金學元 議員** 이것은 대통령은 지시를 했고, 보내야 될 텐데 보낼 구실은 없고, 마침 북한에서는 팩스 한 장이 오니까 그 중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 4명을 찍어서 “너희들이 각서만 써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보낸 것 아닙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아니,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 민간분야를 포함해서 교류와 접촉을 강화한다……

○**金學元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방북단 중에서 지금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지요? 보고 못 받았습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제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議員** 통일부장관이 옛날에 통일부장관도 했고 또 육군사관학교 교수, 연대장, 육군본부 전략기획실 차장,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사무처장, 이와 같은 직책을 맡았었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예.

○**金學元 議員** 그와 같은 이적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북한에 가서 돌출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법무부에서 ‘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 돌출행동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돌출행동 가능성 있다’ 또 국정원에서도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서를 받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출행동이 나왔어요. 저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본인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만 처벌할 것이 아니다, 林東源 장관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음에 정책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鍾河** 金學元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澤秀 議員**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國務總理 李漢東** 고맙습니다.

○**安澤秀 議員**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의원의 지난 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한 발언으로 국회 본회의가 3일 동안 파행된 데 대해서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본 의원의 발언 당시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 청와대의 전화 한 통화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된다면 우리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군사독재정권하의 국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던 金大中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조금도 차별화가 안 된다면 서글픈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과거에 야당은 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사퇴를 수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한 일은 괜찮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 그런 말을 남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 李浩雄 의원은 남의 당의 의총 발언을 문제삼아서 시비를 삼고 나오는 이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저는 李浩雄 의원께서 국회에 일천하셔서 아마 보충질문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자기가 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때는 선배들과 상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우리 정치의 비민주성과 후진성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영국의회처럼 사람의 성을 바꾸는 것 외에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성숙되고 효율적인 기능과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 스스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성역을 만들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일은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상의 과오와 오류도 우리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비판받고 시정되어야만 국민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도 성장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지금 국회의원을 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예.

○**安澤秀 議員**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지금까지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더러 평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 우리 安澤秀 의원님의 인격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 느끼신 것을 압축해서 여러 가지로 고뇌한 끝에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신 말씀이 是다 非다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제 위치에서 온당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澤秀 議員**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 하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에서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소극적인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만 하고 나오시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의욕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정이 난폭운전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음주운전도 안 되고 역추진운전은 더욱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잘 관장해 주셔서 국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6·25가 통일시도전쟁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아까 아주 그럴 듯한 확대·유추해석까지 붙여서 “절대 오해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없습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솔직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를 총리로 있는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정확한 진의를 전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安澤秀 議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전화 받은 것만 250통,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찬반 양론으로 서로 간에 난타전 벌인 것까지 합치면 근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도 보내고, 한 20% 정도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비판도 했어요. 그런데 80% 달하는 분들은 ‘잘했다 속이 시원한 얘기를 당신이 해 주었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그 발언이 의혹과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이다 문장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해를 살 만하고 의혹을 살 수 있고 문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우리나라 국군 장성 출신들의 대표적 단체인 성우회라는 단체 아시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예, 잘 압니다.

○安澤秀 議員 그 단체가 가장 우수한 신문 2면에 지난 8일 자에 그 없는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광고내는 그 충정,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학교수들이 신문에 모두 “대통령은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해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해요.

총리!

대통령 찾아가셔서 한번 해명하시도록 건의할

생각 있어요?

○國務總理 李漢東 제가 安澤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대통령께 올리겠습니다.

○安澤秀 議員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왜 저러시는가 하고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명해 주어야지요. 무슨 대변인, 국정홍보처 이런 조그마한 성명 하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계기를 잡으셔서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오해가 있었다면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납득이 가도록 좌르르 한번 해명해 주셔야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오늘 제가 미루어 짐작한 대통령의 진의에 대한 설명에 의해서 많이들 이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기대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安澤秀 議員 총리, 보십시오.

세상에 6·25를 통일시도전쟁이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은 도대체 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그런 해명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안 해요?

다음 그러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오해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8·15 경축 방북단을 보내는데 신문보도에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이 다 이적단체들이 방북하는 데 대해서 “곤란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긴급지시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양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도가 연달아 터지니, 우리는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國務總理 李漢東 8·15 축전 참가자들의 돌출행동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통일부장관께서 통일부에서 겪은 그대로 진술한 말씀을 15분간이나 드렸습니다. 그래서 安澤秀 의원께서도 여기에 앉아서 내내 잘 들으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꼭 신문에 난 대로, 아까도 洪淳瑛 장관이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는 없었다, 통일부가 스스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마지막 결정을 바꾼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安澤秀 議員 다음에 총리께서 주한미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셨을 적에는 괜찮았는데, 사실로 맞았는데……

○國務總理 李漢東 그런 취지가 아니지요.

○安澤秀 議員 지금 金正日이가 가서 나중에 한



것을 보니까 아마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려를 해서 새로운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했어요.

북한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간에 말 바꾸는 것 처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팩트인데 6·15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신 이후에 제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安澤秀 議員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관계없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김정일이가 변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립 이후 한 번도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철폐,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 세 번째 평화협정 체결, 그것으로 통일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터 국가보안법의 폐지·철폐·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예요.

○國務總理 李漢東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되고 무력이 아닌 평화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安澤秀 議員 제가 설명만 한 것이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검사도 하셨지만 판사도 하셨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예, 판사도 했습니다.

○安澤秀 議員 동국대학교 강모 교수가 바로 8·15 축전 때 평양에 갔다 온 분입니다. 평양의 김일성 생가에 가서 희한한 글을 썼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잘 확인을 못 했는데……

○安澤秀 議員 이 사람은 돌아와서 구속이 됐는데 얼마 구속도 안 되고 석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언론사 사주 세 분은 어떻게 된 판인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따져보아야 알 일을 가지고 그렇게 구속시켜 놓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찬양하고 온 그 교수는 며칠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이 이렇게도 무너진 판사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그런데 그러한 결정을 내린 판사들이 어떠한 소신에 의해서 했는지를 알아보지

않고 피상적인 그런 사실만 가지고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요. 더 알아보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安澤秀 議員 됐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앞으로 국회에 오실 적에는 공부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오세요.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물어도 모른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그다음에 법무부장관한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5·3 인천사태 당시 검찰의 기소문 전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전부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주시는데, 지금 알고 계세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예.

○安澤秀 議員 그 판결문 내용이 뭔지 답변해 보세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그때 당시에는 소요죄가 적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安澤秀 議員 예, 고맙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 법무부, 국정원이 전부 평양방북단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청와대의 지시, 대통령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신문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후사정을 전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鍾河 安澤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議員 인천출신 李允盛 의원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지난번 본질문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라고 얘기하실까봐, 이것은 국정전반에

관한 것이니까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앉아서 제가 오프닝하는 것을 잠깐 들으시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시고……

○國務總理 李漢東 강의를 먼저 듣고요.

○李允盛 議員 오늘 한 일간지의 칼럼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모로 취약하다. 대통령은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고 내년에 월드컵축구가 있고 대통령선거 등 주요선거가 있다. 테러를 꿈꾸는 세력이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테러참사 이후에 북한과 테러와 관련된 언급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초로 압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 및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테러 이후인 10월5일에 미 국무부는 28개 테러국가의 명단을 바꾸면서 적군과는 뺐는데 아직도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속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미의회 테러분석가인 요세프 보단스키는 빈 라덴의 전기를 통해서 빈 라덴이 북한으로부터 지금 백색공포로 통하고 있는 탄저균을 수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 공화당출신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빈 라덴 같은 국제테러리스트는 물론 이라크나 북한 같은 독재국가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헛별정책 이것은 일방적인 퍼주기정책이 아니다. 지금을 보라. 테러하면 북이었고 테러하면 북쪽을 봤는데 지금 조용하지 않느냐, 퍼주기가, 헛별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6월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은 성남공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는 전쟁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제 모시겠습니다.

들으셨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잘 경청했습니다.

○李允盛 議員 현 시국에 관한 문제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북으로부터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첫 질문입니다.

○國務總理 李漢東 우리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보장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와 관련된 확고한 국방태세의 확립 그리고 모든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한미연합방위체제 즉 한미안보동맹에 근거한 한미연합방위체력에서 우리 안보와 관련된 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방금 李允盛 의원께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정부가 그런 우려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議員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질문이 이러한 외국의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었는데 대충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KAL기 폭파사건조작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총리께서 모처럼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KAL 858기 폭파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충분한 조사가 있었고, 대법원의 유죄판결 확정이 있었다, 나 자신도 이것이 조작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재수사 지시 내린 바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총리가 검찰에 수사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

○李允盛 議員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지요.

○國務總理 李漢東 “검찰이 재수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李允盛 議員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느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미국 테러 대참사로 세계가 응징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그 응징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 가운데는 '6·25에 대해서, 아웅산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서 金正日은 사과하라,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서울에 올 수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미묘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느냐, 이 저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한 번 조사해 보든가 알아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國務總理 李漢東 제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기사와 관련해서 관련기관에서는 충분한 심층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짐작합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允盛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러시아가 우리 차관 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북한전력부문의 개선사업에 한국에서 받은 차관의 일부를 써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라는 孫鶴來 철도청장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문제 때문에 논의하러 갔을 때 러시아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북한의 철도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데 북한철도 노후화 개선을 위해서 그 차관을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구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사실 러시아로부터 상계제의 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아주 의혹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8억 달러가 그쪽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니냐……

○國務總理 李漢東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러시아와 한국 정부 사이에 상환문제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협의도 있었고 이 자리에 외교부장관을 지낸 洪淳瑛 장관도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와 러시아 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거기에 북한을 끼어 가지고 상계하느니 뭐하니 하는 그런 고려를 정부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李允盛 議員 지금 말씀……

○國務總理 李漢東 믿으세요.

○李允盛 議員 꽤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금방 안 잊어 버립니다.

들어 가시고 통일부장관 모시겠습니다.

내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시겠다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안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북한이 왜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했다고 통일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신지요?

○統一部長官 洪淳瑛 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 이유는 미국의 대 테러 군사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 취하고 있는 경계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남한지역에서 회담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것이 대외적인 명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때 그 핵심에는 역시 남북화해와 교류의 진도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당위성이나 이익에 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李允盛 議員 통일부장관으로서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과 북한은 체제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사회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제와 사고가 다른 두 체제가 평화공존해야 한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전혀 일치되지 않을 때에는 신뢰와 의심을 동시에 하면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允盛 議員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테러지원국에 들어 있고 생화학무기를 세계에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 보유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하는, 세계의 경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이때에 100명에 가까운 북한주민들을 서울로 보낸다는 것은 마음놓을 수 없다라는 사전조치가 아닌가, 테러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統一部長官 洪淳瑛 그동안 북한외교부 대변인도 테러에 반대하며 모든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강력한 성명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미국에 사망자에 대한 위로까지 표명하는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동참하는데 국가안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규범이나 세계적인 추세에 저항해서 문자 그대로 돌출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允盛 議員 알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끝으로 법무부차관 모시겠습니다.

보물선 주가조작이 아시는 것처럼 보물선이 아닙니다. 진도 앞의 죽도 해저 바다 밑의 동굴 속에 엄청난 탄피 속에 보물이 들어 있다, 바로 해저동굴 보물사건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容湖가 사업에 손을 댔다, 그전에 李亨澤 대통령 친인척이 돈 좀 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모든 경제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정원의 金亨允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金亨允, 李亨澤, 李容湖 이 세 명의 커넥션이 바로 주가조작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그 점에 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金亨允 국정원 전 경제단장이 관련된 것이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었던 것은 金亨允이 李京子로부터 돈 50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부분 이것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후세력이 없고…… 다만 소위 말하는 보물선 인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들,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수사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李允盛 議員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국정원이 직접 보물탐사에 나섰다라는 얘기도…… 그렇지요?

○法務部次官 辛光玉 예.

○李允盛 議員 그러다 보니까 더욱 국민의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야당의원들에 대한 사정절인데 어제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없다, 총리께서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정을 했다고 의심이 가는 권력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해서……

그때 바로 민정수석을 담당하고 계셨고 우리는 거기가 사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때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法務部次官 辛光玉 우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

을 하고 있을 때도 그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격월제로 나왔습니다. 5월, 7월, 9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실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李允盛 議員 담당자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답변으로 듣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金鍾河 李允盛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3차 본회의는 10월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出席議員(225人)

- |       |       |       |         |
|-------|-------|-------|---------|
| 姜 三 載 | 姜 成 求 | 姜 淑 子 | 姜 申 星 一 |
| 姜 雲 太 | 姜 仁 燮 | 姜 昌 成 | 姜 昌 熙   |
| 姜 賢 旭 | 高 珍 富 | 高 興 吉 | 權 琪 述   |
| 權 五 乙 | 權 哲 賢 | 權 泰 望 | 金 景 梓   |
| 金 敬 天 | 金 杞 培 | 金 淇 春 | 金 德 圭   |
| 金 德 龍 | 金 德 培 | 金 東 旭 | 金 樂 冀   |
| 金 滿 堤 | 金 明 燮 | 金 武 星 | 金 民 錫   |
| 金 芳 林 | 金 富 謙 | 金 聖 順 | 金 晟 祚   |
| 金 令 培 | 金 榮 駟 | 金 泳 鎭 | 金 榮 春   |
| 金 玉 斗 | 金 容 甲 | 金 容 鈞 | 金 龍 學   |
| 金 雲 龍 | 金 元 基 | 金 元 雄 | 金 允 式   |
| 金 一 潤 | 金 貞 淑 | 金 鍾 河 | 金 宗 鎬   |
| 金 鎭 載 | 金 燦 于 | 金 忠 兆 | 金 台 植   |
| 金 泰 弘 | 金 宅 起 | 金 鶴 松 | 金 學 元   |
| 金 浩 一 | 金 洪 信 | 金 弘 一 | 金 孝 錫   |
| 羅 午 淵 | 南 景 弼 | 南 宮 哲 | 都 鍾 伊   |
| 柳 在 乾 | 柳 在 珪 | 柳 興 洙 | 孟 亨 奎   |
| 陸 堯 相 | 文 錫 鎬 | 文 喜 相 | 閔 鳳 基   |
| 朴 寬 用 | 朴 光 泰 | 朴 權 惠 | 朴 明 煥   |
| 朴 炳 錫 | 朴 炳 潤 | 朴 尙 奎 | 朴 相 千   |

朴相熙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洋洙 朴容琥 朴源弘 朴仁相  
 朴在旭 朴鍾根 朴宗雨 朴鍾雄  
 朴鍾熙 朴柱宣 朴柱千 朴昌達  
 朴赫圭 裴基善 裴奇雲 白承弘  
 徐相燮 徐廷和 徐清源 孫鶴圭  
 孫希妊 宋光浩 宋永吉 宋勳錫  
 辛卿植 申溪輪 申榮均 申鉉泰  
 沈奎燮 沈揆喆 沈載權 沈在哲  
 安昺律 安大崙 安東善 安泳根  
 安澤秀 嚴虎聲 吳世勳 吳長燮  
 元喆喜 元喜龍 俞成根 尹景湜  
 尹斗煥 尹汝雋 尹鐵相 尹漢道  
 李康來 李根鎭 李洛淵 李萬燮  
 李美卿 李方鎬 李秉錫 李富榮  
 李相得 李相培 李相洙 李祥義  
 李性憲 李良熙 李嫵淑 李完九  
 李龍三 李元昌 李源炯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李在善 李在五  
 李在禎 李在昌 李正一 李鍾杰  
 李柱榮 李昌馥 李漢東 李海鳳  
 李協 李浩雄 李會昌 李訓平  
 李熙圭 林仁培 任鍾哲 林鎭出  
 任太熙 張誠珉 張誠源 張永達  
 張正彦 張泰玩 全甲吉 田塔源  
 全在姬 鄭均桓 鄭大哲 鄭東泳  
 鄭東采 鄭夢準 鄭文和 鄭範九  
 鄭柄國 丁世均 鄭宇澤 鄭義和  
 鄭寅鳳 鄭長善 鄭在文 鄭鎭碩  
 鄭昌和 鄭哲基 趙富英 趙誠俊  
 趙舜衡 曹雄奎 曹正茂 趙漢天  
 朱鎭吁 千容宅 千正培 崔明憲  
 崔炳國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龍圭 崔在昇 秋美愛 河舜鳳  
 咸錫宰 咸承熙 許雲那 許泰烈  
 玄敬大 玄勝一 洪在馨 黃勝敏  
 黃祐呂

○出張議員(2人)

李揆澤 韓昇洙

○請暇議員(19人)

姜在涉 金光元 金杞載 金榮煥  
 金鍾泌 金炯昨 金希宣 朴燾太  
 偈松雄 孫泰仁 申榮國 安商守  
 李康斗 李源性 李漢久 田溶鶴  
 鄭亨根 曹喜旭 崔秉烈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李漢東  
 통일부장관 洪淳瑛  
 행정자치부장관 李根植

○出席政府委員

법무부차관 辛光玉

【報告事項】

○議案提出

담배事業法中改正法律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10월16일 정의화·김원웅·허태열·윤두환·김용학·안택수·정형근·나오연·정문화·손태인·엄호성·김부겸·남경필·오세훈·정병국·이원형·김진재·김동욱·서정화·박재욱·손학규·박종근·김학송 의원 발의)

전쟁등으로발생한항공기사고로피해를입은제3자에대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가보증동의안

(10월16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財政經濟委員會에 회부하겠음

國民健康增進法中改正法律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10월16일 정의화·김원웅·허태열·윤두환·김용학·안택수·정형근·나오연·정문화·손태인·엄호성·김부겸·남경필·오세훈·정병국·이원형·김진재·김동욱·서정화·박재욱·손학규·박종근·김학송 의원 발의)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미군공여지역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목요상 의원 발의)

(10월16일 목요상 의원 외 40인 발의)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請願提出

약사법개정에관한청원

(2001년10월16일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24-78 대한한약사회 회장 이주영으로부터 金洪信 의원의 소개로 제출)

保健福祉委員會에 회부하겠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

(2001년10월16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중 외 51인으로부터 全甲吉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

行政自治委員會에 회부하겠음

○書面答辯書提出

정보통신부등에대한감사결과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사회복지정책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이상 2건 10월1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